

국힘, 대구시장 출마 러시…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 예고

지방선거 돈보기

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전통 보수 지지자 많아 희망자 쏠려
행정통합 급물살에 선거전략 고심
후보 없는 민주당, 인물 찾기 난항

TK(대구·경북)는고(故)박정희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종갓집’·‘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보수가 아무리 어려워도 TK만은 보수를 따듯하게 품어주는 등지 같은 곳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 등 중도층 유권자가 많은 곳에서 우(友)경화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TK에선 보수 지지자들의 불며 현역 의원과 당 내 중진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TK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 통합시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나오면서, 후보자들 간 정치적 쟁점과 선거 전략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명성 경쟁이나, 반성·혁신 앞세우나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장 선거와 경북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전통 보수 지



주호영 의원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최은석 의원



유영하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자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헌정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보수의 적통’을 주장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특별위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지방선거 당심 70%, 민심 30%의 경선 규칙 반영 비율을 수용하지 않고 당심 50%, 민심 5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반성과 혁신’에 초점을 두는 후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 한 명만 선출하게 돼,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행정통합 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장 선거 현역 의원 출마만 5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선거는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지역 내 중진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구 현역 의원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 위군갑),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6선의 주호영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동상 앞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주 의원은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인 윤여계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지낸 최은석 의원도 출마 선언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원외에선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구시장 도전을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직접적으로 출마 계획을 밝히진 않았으나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극우 성향의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참석한 바 있다.

경선 전부터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선거가 뜨거운 가운데, 반대로 TK가 열세 지역인 민주당은 후보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홍의락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3선 도전 유력

경북지사는 현직인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에 관심이 모인다. 혈액암 투병 중에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 지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서 3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지사 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9월 퇴임하고 경북지사에 본격 도전했다.

장동혁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경북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의 3선 의원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표적인 친박(박근혜)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공식 출마선언을 한 주자는 없다. 안동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조혁신당 합당, 명분 있으나 추진 어려워”

필요성 공감, 시기·방식에 문제 제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우려 표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합당 건을 논의한 가운데,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겠다는 데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 사실상 양당 합당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의) 발언을 종합하면, 첫째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우영, 이정현 의원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했다.

또한 “두 번째,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지만 추진이 어

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서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의총에서 합당과 관련해 가감없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으나, 시기와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두 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지금의 입법 속도로 국제변화 대처 못해”

李, 국회에 조속 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의 국회 처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주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의 우선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박태홍 기자

김정관 “대미투자법 처리되면 관세 인하”

(산업부 장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이 없던 일이 되고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압박의 여지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엔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관세 25%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세에 게재하는 방식이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이 되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의 근거를 말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 (관세 재인상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만났었다”며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는데, 러트닉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미 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다르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입법 지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투자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엔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혹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된 결론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